

‘화성살인’ 누명 씌운 경찰, 32년만의 사과...“깊이 반성”

경찰이 과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성여(53)씨에 대해 가혹행위로 자백을 받아내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한 사과 입장을 17일 밝혔다. 윤씨는 이 사건으로 20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이날 재심을 통해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

이날 경찰청은 재심 선고 이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재수사를 통해 연쇄살인 사건 진범을 검거하고 청구인의 결백을 입증했으나,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란 낙인을 찍어 20년간의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날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관련 재심 선고공판에서

경찰청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입장 표명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무죄 선고

경찰, 윤성여 범인 지목...가혹행위로 자백

20년 옥살이 후 출소...이춘재 자백 뒤 재심

윤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13세 여성이 잠자던 중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사건이다.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은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이듬해 붙잡힌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는데, 이때까지는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2·3심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주장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후 윤씨는 20년 옥살이 후 감형을 받아 2009년 출교했고, 이춘재(56)가 범행을 자백한 뒤인 지난해 11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가혹행위를 통해 윤씨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윤씨 자백과 관련해 “불법 체포, 감금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쪼그려뛰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며 “임의성이 없거나 적법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 8차사건의 범인으로 투옥되어 20년간 복역한 윤성여 씨가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기뻐하고 있다.

이 아니다”라고 했다.

경찰은 윤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수사 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불송치

등 수사 관련 권한 확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선 ‘깜깜이 인권 침해 수사’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올러 “내·외부 심사 체계를 필수적 수사 절차로 정착시키고 수사 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탄탄히 마련해 수사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찰이 낸 입장에는 당시 수사 관여자 특진 취소 등 후속 조치, 경찰청장의 대면 사과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32년 만에 살인자 낙인을 벗은 윤씨는 청구에서 새 삶을 살아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서선욱기자



출입통제 운천호수공원 17일 오전 광주 서구 운천호수공원이 도시철도2호선 공사로 인해 물이 빠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운천호수공원은 2022년 9월까지 이용 할 수 없다.

고흥 리조트 편입 땅 주인들, 토지 돌려달라 소송 ‘승소’

전남 고흥만에 건립된 리조트의 토지 주인들이 고흥군과 건설사를 상대로 땅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9단독 최두호 부장판사는 2018년 5월 고흥만 리조트 부지에 포함된 토지주 7명이 고흥군과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고흥군이 땅을 민간콘도의 부지로 사용하기로 정했으면서도 원고들에게는 땅을 수변노출공원사업 부지로 사용할 것처럼 주장한 것은 토지주들을 기망한 것으로 봤다.

건설사도 고흥군의 토지 협의 취득 과정에서 기망에 의한 사실을 인식했

던 것으로 판단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흥군과 건설사 측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고흥군은 법원을 판결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기자

‘방심하다 큰 코’ 전동킥보드 등 화재·폭발 요주의

화재나 폭발에 취약...대부분 충전 중 발생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화재 등 안전사고도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7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기 관련 화재 사건은 모두 8건에 이른다.

6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735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6건이 배터리 충전 중이었고, 나머지 2건은 물리적 충격에 의한 것이다.

실제 지난 15일 북구 누문동에서는 운행중인 전동 킥보드가 차량과

충돌해 킥보드 배터리와 타이어 등이 불에 탔다. 화인 조사 결과 전동 킥보드 배터리 박스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9월에는 광산구 모 아파트에서 전동기기 충전 중 배터리 과충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3200여 만원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기 배터리는 화재나 폭발에 취약해 한 번 불이 나면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이어진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크기가 작고 에너지 밀도가 높으며 인화성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충전의 경우 배터리 내부에서 가스 폭발이 발생하고 급속리튬이 불꽃 반응에 의해 폭죽과 같이 분출되기 때문이다.

이에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전이나 관리 등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전동기기를 충전할 때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장시간 실내 충전을 하거나 취침 중 충전을 피해야 한다.

또 반드시 인증받은 정품을 사용하고, 직사광선에 오랜 시간 노출되거나 고온의 환경을 피하며, 동절기 실내로 들어올 때는 배터리 내부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충전해야 한다.

김영동 시 방호예방과장은 “전동 킥보드는 편리성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용하지만 배터리로 인한 위험성이 큰 만큼 사용법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봉우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